

##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

정진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 Reinforce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al Death in the U.K.: Focusing on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Jinwoo Jung\*

Seongnam District Employment and Labor Off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ABSTRACT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verall and in detail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the U.K. and the principal contents of this act.

**Methods:** A variety of articles related to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egislation was enacted and the details of this ac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In enacting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legislators mainly took elements of legal culture into account and focused on seeking to broaden the law on corporate manslaughter. An indictable offence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mmitted if the way in which an organization'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causes a person's death and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the relevant duty of care ow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deceased.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zed by its senior management is a substantial element in the breach. Upon conviction, a corporation may be ordered to remedy any breach, publicize its failures, or be given an unlimited fine.

**Conclusions:** The enactment background and details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s understood accuratel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heighten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senior management or corporations that cause a person's death in Korea.

**Key words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Mens rea*, relevant duty of care, senior management, unlimited fine

### I. 서 론

영국에서 2007년에 제정된 ‘법인 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은 기업 등 법인, 중앙정부, 경찰서,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등의 조직체(Organization)가 일으킨 사망재해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률이다(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7). 이 법률의 제정은 1997년에 노동당이

정권을 획득한 직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정부 내에서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7월에 이르러 비로소 법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26일에 제정(2008년 4월 6일 시행)되었다.

영국에서 종래 사망재해에 대한 조직체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조직체의 특정 운영(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증명될 필요가 있었지만, 본법은 조직체의 사망재해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조직체의 관리(운

\*Corresponding author: Jinwoo Jung, Tel: 031-788-1500, E-mail: jjw35@hanmail.net,

Seongnam District Employment and Labor Office, 146,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ceived: December 2, 2013, Revised: December 20, 2013, Accepted: December 23, 2013

영)체질로 귀속시키고 있다. 운영책임자(Directing mind), 즉 경영진 개개인이 주의의무의 위반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야 할 입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조직체의 관리(운영)체질이 주의의무 위반을 조장하였는지 여부를 형사입건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법은 영국정부의 최초 제안서(2000년)에서 ‘법인 살인’(Corporate killing)이라고 명명되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본법이 기업(산업재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본법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기업 살인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본법은 사망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 제목상의 ‘Manslaughter’는 우리나라의 형법 개념으로는 ‘살인’보다는 ‘과실치사’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법은 적용에 있어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이 아닌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이 아닌 ‘단체’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본법의 제목에서 ‘Corporate’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본법에 대한 정식 명칭을 ‘법인 과실치사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등 제정경위와 법률의 주된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망재해 발생 기업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문헌 검색 및 검토

본 연구는 문헌고찰로 수행되었다. 영국에서 사망재해를 유발한 기업 등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제정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법무부, 내무부, 의회 등의 각 홈페이지(HSE: <http://www.hse.gov.uk>, 법무부: <http://www.justice.gov.uk>, 내무부: <http://www.home-office.gov.uk>, 의회: <http://www.parliament.uk>)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법인 과실치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응과 입장 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TUC, 경영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 그리고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업책임 감시단체인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와 INQUEST의 각 홈페이지(TUC: [www.tuc.org.uk](http://www.tuc.org.uk), CBI: [www.cbi.org.uk](http://www.cbi.org.uk),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http://www.corporate-accountability.org>, INQUEST: <http://inquest.gn.apc.org>)와 영국의 유력지인 guardian지(<http://www.guardian.co.uk>)의 기사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된 주장을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사망재해 발생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과 관련된 영국의 입법상황과 그간 영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형사처벌론에 관한 논문을 법학 잡지에서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 2. 고찰 범위

영국에서 법인 과실치사법이 제정된 경위와 과정 등 제정배경과 본법의 주된 내용을 입법사적 시각에서 전반적이고 심층적으로 논구하고, 본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제정 배경

#### 1) 제정 경위

영국의 법제도에서 위험운전치사 등 도로교통에 관한 사망재해의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살인죄는 살의(Malice aforethought)를 가지고 행해지는 모살(謀殺, Murder)과 그것 이외의 비모살(非謀殺, Manslaughter)로 대별된다.

비모살은 도발에 의한 격노상태, 특이한 정신상태 등에 의해 죄의 감경사정을 구성하는 정황 하에서 행해진 고의살(故意殺, Voluntary manslaughter)과 그렇지 않

은 비고의살(非故意殺, Involuntary manslaughter)로 구분된다. 후자는 다시 불법적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 비모살(Manslaughter by an unlawful act)과 현저한 부주의에 의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중과실 비모살(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로 분류된다.

영국의 형법에서는 대륙법 국가와는 달리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에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법인 비모살이 발생한 때는 주의의무의 해태에 의한 중과실 비모살이 적용되어 왔다. 또한 법인과 아울러, 해당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법인 구성원도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Feldman, 2004).

그러나 종래의 보통법(판례법) 제도에 의해 법인의 비모살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다. 먼저 법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종종 원용되는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의 원칙이 명예훼손, 미혹행위, 제정법(성문법)상의 범죄(Statutory crime)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보통법 범죄인 비모살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The Law Commission, 1996).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소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 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기업 등 법인 그 자체를 체현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보통법상의 ‘동일시(Identification) 원칙’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법인 비모살을 기소하는 경우, 운영책임자로 정의되면서 법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비모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일시 원칙에 따르면, 법인을 과실치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경영진 중에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이고 기능이 광범위하게 넓은 기업 등의 조직체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나아가 업무의 안전관리를 분산하고 위탁하는 최근의 경향과 상호작용하여 대기업이 용이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소의 성공률이 적고 유죄선고를 받는 것이 소규모 기업뿐인 것은 이 때문이다(The Law Commission, 1996). 그리고 보통법은 중과실(Gross negligence)에만 적용되고 국왕의 기관(Crown Body)은 면책특권에 따라 기소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법인 과실치사의 실태는 사업장에서의 사망 재해와 일반시민이 관계된 사망재해로 대별된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재해는 법안 제정 공약이 발표되던 2001년 시점에서 연간 평균 300명을 넘는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었다(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2003). HSE의 추정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1,500명이 사업장에서 재해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약 40%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함에 기인한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추계에 의하면, 350개의 기업이 법률의 불비(不備)에 의해 기소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Tran, 2004). 1992년 이래 사업장에서의 비모살로 34건의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2004년까지 6개의 소규모 기업뿐이었다(Home Office, 2005).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영국의 대규모 노동조합의 하나인 운송일반노동조합(TGWU)의 사무국장 Woodley (2006)은 2006년 7월 24일자 가디언지의 기고문에서 “과거 30년간 발생하였던 1만명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건에서 약 70%가 관리의 결함에 기인한다고 안전보건청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책임자가 유죄선고를 받은 예는 11건이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은 예는 그 중 5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망재해에 대한 당시 법적 책임의 미약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시민이 관계된 사망재해에 관한 유명한 예로서는, 1987년 188명(승객 150명, 선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객선 전복사고, 1997년에 사망 7명, 부상자 151명이 발생한 열차 충돌사고 등이 열거된다. 여객선 전복사건으로부터 2002년 11월 사이에 철도, 선박 등의 대형사고가 8건 발생하고 451명이 사망하였다(The Guardian, 2002). 이들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기소되었지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일수록 ‘동일시 원칙’의 운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여 누구도 비모살의 형사책임이 묻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대형사고 및 이것에 대한 사법(司法)의 대응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법 개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 2) 법인 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이러한 경과를 거쳐 동일시 원칙이 검찰 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해짐에 따

라, 정부의 요청을 받은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비모살 규정의 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인에 의한 비모살에 대해서도 검토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본 위원회는 1996년에 보고서 ‘형사법전의 제정: 비고의살(非故意殺)’을 발표하고, i)비고의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Reckless killing)과 중과실에 의한 살인(Killing by gross carelessness) 2종류로 구분할 것과 ii)법인에 대해 후자에 대응하는 법인 과실치사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The Law Commission, 1996c).

1997년에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같은 해 10월의 당대회에서 관련법제를 개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획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다가 2000년 5월에서야 비로소 정부는 법안에 대한 제안서인 ‘비고의살에 관한 법률의 개혁(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을 발표하였다(Home Office, 2000).

이 제안서는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규정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고용기관(법인격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까지 확대하는 내용, ii)법인조직뿐만 아니라 운영책임자를 포함한 법인의 임원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안서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처벌은 경영자격을 정지하는 제안에 머물러 있었다. 구금형 적용에 대한 신중한 자세는 과거 사건의 유족, 노동조합 등을 실망시켰다.

그 후 협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노동당은 공약에서 법인 과실치사의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2003년 5월이 되어 같은 해 가을에 초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출기일이 2004년 봄으로, 그리고 2004년 겨울로 계속 연기되다가 2005년 3월 23일에 마침내 ‘법인 과실치사법 초안(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을 포함한 공개협의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다(Home Office, 2005).

초안은 2000년 제안서의 제안과 달리 국왕의 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법인 과실치사의 기소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역으로 비법인격의 조직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찰은 감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리위원회(Policy authority)는 법인격의 조직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비법인격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초안에서 경찰서는 기소대상으로 지

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찰서도 법인 과실치사의 기소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과제는 공개협의의 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초안이 규정하는 법인 과실치사의 정의는 법률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비교하여 종래의 동일시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위원회의 권고에서는 위험이 명백한 것과 피고가 그것을 예상하여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근로자 또는 기타의 자의 안전에 관계되는 법인 활동의 운영에 사망재해를 일으킬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한편, 초안에는 운영책임자가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 위반이 사망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아야 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반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였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 등 운영책임자의 개인책임을 묻는 규정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운영책임자의 직접책임을 현저할 때는 종래의 보통법상의 비모살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다(Home Office, 2005).

### 3) 법인 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종래 법인의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벌금이 약하였고, 일반적으로 범죄 취급되지 않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 위반을 기소하는 방법이 기소의 성공률이 높았다. 정부는 초안의 규정이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죄로 된 것을 공중에 알리는 것에 의한 신용도의 저하라고 하는 측면으로부터 억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본 초안의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First Joint Report, 2005).

첫째, “운영책임자에 의한 업무의 운영 또는 조직이 사망재해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운영의 분권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 규정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망라할 수 없는 점.

둘째,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반에 의한 이윤추구의 목적을 고려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점.

셋째, 운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억지력이 충

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넷째, 독점적 공적 직무(Exclusively public function)의 수행 및 공공정책에 관한 판단이 적용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에 관해서 이윤추구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대체로 곤란한 점. 즉 국왕의 기관에 대한 기소의 면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영국노동조합총연맹(Trade Union Congress, TUC)은 초안의 제출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협약의 과정에서 운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의 도입을 적극 촉구해 나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자단체인 CBI는 경영자 개인책임을 묻는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것을 환영하면서 상기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2000년의 제안서에 대하여, CBI는 새로운 법률이 경영자의 기소에 대한 위험회피적인(Risk averse)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자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에 반대하였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금번의 초안이 개인 소추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부가 경영계의 압력에 굴복하였다는 비판도 나왔다(Monbiot, 2004).

산업계로부터의 개인책임 추궁에 대한 반대는 개인책임 추궁이야말로 법인 과실치사에 의해 최고의 억지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인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는 영국의 기업 운영책임자의 표본으로 추출된 120명 중 3분의 2가 개인책임 추궁이 사업주에게 직업에 수반된 위험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촉진한다고 회답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호소하고 있다(Davis, 2004).

#### 4) 법인 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초안에 대한 공개협약과 2005년 5월 5일의 총선거를 사이에 두고 2005-2006 회기 말인 2006년 7월 20일에 마침내 법인 과실치사법안(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Bill)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명칭이 변화된 것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본 초안이 법안에서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법안에서는 위 3)의 첫째에서 넷째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얼마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첫

째에 대하여, 운영책임자 개인이 주의의무의 위반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야 할 입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조직체의 관리(운영)체질이 위반을 조장하였는지가 형사입건의 요건이 되어 동일시 원칙이 후퇴하였다. 또한 위반 단체에 의한 이윤추구의 목적을 증명하는 요건이 삭제되고, 유죄 선고율의 제고와 공공기관 소추의 용이화가 도모되었다. 단, 셋째의 운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 등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졌다.

법안의 제출은 노사 쌍방으로부터 지지되었지만, 그 뇌양스는 다소 달랐다. 근로자단체는 위반한 법인의 소추수단 강화를 환영하였지만, 사용자단체인 CBI는 법인 과실치사의 연대책임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10일에 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의 7회에 걸친 심의를 마치고 11월 8일의 회기종료를 맞이하였다.

법안은 계속심의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차기회의가 소집된 11월 16일에 다시 제출되었고, 12월 4일에 하원의 심의를 통과한 후 익일에 상원의 제1독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법안은 2006년 12월 19일에 상원의 제2독회를 마치고 2007년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상원 대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심의되었다. 본 법안은 2월 5일의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2007년 2월 28일에 제3독회를 마쳤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상원과 하원의 비판이 약 5개월간 계속된다.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신병구속이 된 자의 사망재해이다. 이들에 대한 사망 책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INQUEST)에 의해 제공된 통계에 의하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류 중의 용의자가 사망한 자와 교도소에서 자살·타살에 의해 사망한 자는 2006년 기준으로 각각 31명, 154명이었다(INQUEST, 2002-2012). 당시의 영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문제로 되고 있었고, 상원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기소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였다.

정부, 특히 법안 담당부처 책임자였던 당시 내무부(Home Office)장관은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면 법안을 파기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Hurst, 2007). 이에 대한 의회의 반발은 컸는데, 특히 보수당의 한 의원은 법률이 내무부의 관할

에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결국 상원은 2월 5일의 위원회 보고에서 223 대 127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Hencke, 2007).

결국 정부는 동 법안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였지만 상원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안은 7월까지 상원과 하원을 4번 왕복하게 되었다. 7월 19일 마침내 법무부 장관이 상원안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히고, 7월 26일에 법률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 2. 법률의 주요 내용

법인 과실치사법은 전체 2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안은 영국 전역에 적용된다. 각 조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위법행위

법인 과실치사죄는 법인, 중앙정부, 경찰서, 조합 및 사업주로서의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등의 조직체가 자신의 활동의 관리(Managing) 및 조직(Organising) 방법이 관련 주의의무(Relevant duty of care)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사람의 사망을 유발한 경우에 적용된다[제1조(1), (2)].

법인치사죄는 조직체의 상급관리직(Senior management), 즉 경영진에 의한 관리(운영) 및 조직(편성) 방법이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의 실질적 요인일 때에 성립한다[제1조(3)]. 조직체의 위법행위가 일정한 상황에서 당해 조직체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제1조(4)(b)]. 조직체의 관리·조직이 부적절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어느 누구(특정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경영진(상급관리직) 개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체로서의 관리·조직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경영진이란 조직체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의 관리·조직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실제적인 관리·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제1조(4)(c)].

사망의 책임은 당해 조직체가 부담하고 조직체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체의 구성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법이 개인에 대한 보통법상의 중과실

치사죄, 안전보건법규 위반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인 등 조직체가 재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한이 없는 벌금이 부과된다. 양형평의회(Sentencing Council)의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면, 벌금의 금액은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연간 평균매출액의 5%에서 시작하되, 가중 또는 감경요인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2.5%에서 10% 사이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The Sentencing Council, 2007).

### 2) 관련 주의의무

조직체의 관련 주의의무란, 조직체와 관련하여 i) 사업주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ii) 토지의 점유자로서 토지 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iii)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건축 및 유지, 기타의 상업적 활동 또는 시설이나 탈 것의 사용·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iv) 교도소, 경찰서, 법원, 이민관리당국, 병원 등이 신병을 억류(유치, 구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제2조).

피해자가 위법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주의의무의 면제는 법인 과실치사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정책에 관한 판단(특히 예산의 배분 또는 공익의 비교), 독점적 공적 직무의 수행 및 법률에 근거한 조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관련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3조).

군대에 의한 작전행동 및 그 준비 또는 지원에 관하여 국방부는 관련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제4조). 그리고 테러, 치안불안 및 심각한 무질서에 대응하는 치안유지·법집행 활동 및 그 준비, 지원 또는 훈련에 관하여 공공기관은 관련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제5조).

긴급사태에서 소방대구조, 국민보건서비스 및 군대 등이 행하는 활동(조직체의 피고용인 또는 조직체를 위하여 일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활동, 시설점유자로서 수행하는 활동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관련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제6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된 아동의 감독·보호 등에 관한 직무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제7조).

법인 과실치사법상의 주의의무는 보통법상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하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에 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참고기준이 될 것이다.

###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배심원이 관련된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판단할 때는, 당해 조직체가 위반혐의와 관련된 안전보건법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지, 그리고 입증된다면 그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얼마나 많은 사망위험에 노출시켰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2)].

또한 배심원은 당해 조직체 내부의 태도, 정책, 체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이 상기 위반을 조장하거나 용인한 정도와 위반혐의와 관련된 안전보건지침(안전보건법규 집행당국에 의해 발행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코드, 지침서, 매뉴얼, 유사간행물)을 고려할 수 있다[제8조(3), (5)].

### 4) 구체명령 및 공표명령

조직체의 과실치사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한 법원은 당해 단체에 대하여 i) 관련된 위반, ii) 위반결과 발생한 문제로서 사망의 원인인 문제, iii) 위반을 발생시킨 조직의 정책, 체제 또는 관행에서의 안전보건상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명령(Remedial order)을 내릴 수 있다. 구체명령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조치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 그 조치를 실행한 증거를 관련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죄선고를 받게 되고 정식 기소에 의해 상한이 없는 벌금이 부과된다(제9조).

그리고 조직체의 과실치사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한 법원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위법의 구체적인 내용, 부과된 벌금액 및 구체명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을 내릴 수 있다(제10조).

###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정부기관, 군대, 경찰서 등의 경우, 특별히 법률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적용되는 기소 면책은 법인 과실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제14조).

###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법인 과실치사법은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재해에 대해서 적용된다.

법인 과실치사죄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한다(제17조). 개인은 법인 과실치사 위법행위의 방조, 교사, 조연 또는 알선의 죄로 기소될 수 없다(제18조).

사망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 위반행위와 법인 과실치사법 위반행위로 유죄 인정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제19조). 그리고 법인 과실치사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법인 및 기타 조직체에 적용되던 보통법상의 중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죄는 폐지된다(제20조).

## 3. 법인 과실치사법의 평가 및 적용 가능성

### 1) 법인 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정부는 2006년 7월에 발표한 법인 과실치사법안의 규제영향 평가서에서,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종업원의 건강불량에 의한 지출은 사회 전체적으로 200~318억 파운드이고, 변호비용, 법률자문 또는 훈련 등의 법인에 의한 지출과 기소수수료 등의 정부지출의 합계는 1920~2120만 파운드라고 추계하면서, 법률 제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고를 0.1% 삭감하는 것만으로도 채산성이 맞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제정에 의하여 연간 법인 과실치사의 소추건수가 10~13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ome Office, 2006).

그러나 법인 과실치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본법 위반으로 실제로 기소된 사례는 4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망치보다는 적게 기소되고 있다. 예상보다 적게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전망을 잘못 하였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기업 등이 본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본법의 적용을 받을 만한 사망재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시민단체인 법인책임센터는 법인 과실치사법의 제

정을 환영하면서도 본 법안이 여전히 동일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점, 운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인 과실치사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상원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경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2007). 또한 법학자인 Gobert(2008)는 본법이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의 근시안적인 위험관리 결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본법 제정의 상징적인 의미가 본법의 방법론적 결점을 능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표명령뿐만 아니라 법인 과실치사죄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에 수반하는 이미지 실추는 기업 등의 입장에서 벌금 이상의 손실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Leckie, 2007).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전달이 활발한 오늘날의 사회환경에서는 기업 등의 규모가 클수록 벌금보다는 사회적 이미지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법인 과실치사법의 과실치사죄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벌금액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벌금액 수준이 낮아서 전자가 제정된 것은 아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한이 없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실제로 동법 위반으로 수백만 파운드의 벌금액이 부과되기도 한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오히려 법인 과실치사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범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보통법상의 법인 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로는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영국은 보통법상의 법인 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처벌요건을 완화하여 제정법상의 법인 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Sim, 2013).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 과실치사법은 경영진에 의해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주의의무 위

반의 실질적 요인일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큰 회사의 경우 경영진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어 동일시 원칙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법무부는 경영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하향 위임함으로써 본 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것도 경영진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지 못하는 것의 일부에 해당되어 본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Ministry of Justice, 2007).

법인 과실치사법에 의한 유죄 인정은 기업 등의 단체에 막대한 벌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그 대외적 이미지(평판)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단순히 ‘규제적 위반(Regulatory offence)’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본법 위반은 ‘진정한 범죄’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기업 등에 더 큰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Barret, 2007). 그리고 사망재해의 희생자(유족)와 일반국민으로부터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본법은 이미 제정 과정에서 사망재해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과 공중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것만으로도 산업재해의 감소에 적지 않은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재해를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등의 사망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법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선고형을 법정형에 근접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정한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살인법’ 제정 주장은 산업재해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처벌수준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과는 제정배경이 다르다.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처벌수준의 강화보다는 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기업 등 조직체의 관리(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업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재해 발생 기업 등에 대한 처벌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제정배경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르게 주장되는 이유가 영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후자라면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등의 사망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의 적용을 근로자,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재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면,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형법을 개정하거나 영국과 같이 특별형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법의 적용을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한정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후자의 방식을 취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편의 하나로 과실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재해를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재해를 초래한 결과적 가중범(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위반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입법형식에 있어 특별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과 같이 범문화적 고려나 처벌요건의 대폭적인 완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보다는 특별형법의 제정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된 내용을 입법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법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법에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은 대형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사망재해에 대한 기업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3년간에 걸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다.

선진국에 비해 기업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부여가 낮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사망재해를 초래한 기업 등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개정) 논의는 논의만으로도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사회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업 등의 사망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사업장’에서의 사망재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련법 전반을 시야에 넣고 검토한 후에 입법목적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재해 발생 기업 등에 대한 책임을 어떤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References

- Barret B. Liability for Safety Offences: Is the Law Still Fatally Flawed", *Industrial Law Journal* 2007;37(1):117
-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Safety Statistics. 2003. Available from: URL: [http://www.corporateaccountability.org.uk/stats\\_deaths.html](http://www.corporateaccountability.org.uk/stats_deaths.html)
-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Press Release 23 July 2007. Available from: URL: [http://www.corporateaccountability.org.uk/press\\_releases/2007/julylordagreement.htm](http://www.corporateaccountability.org.uk/press_releases/2007/julylordagreement.htm)

- Davis C. Making companies safe: What works? London: 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2004. p. 51
- Feldman D. English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1241-1252
- First Joint Report.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and Work and Pensions Committees, Draft Corporate Manslaughter Bill First Joint Report of Session 2005-2006. 2005. para 130-158
- Gobert J.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The Modern Law Review 2008;71:413-433.
- Hencke D. Peers widen scope of manslaughter bill in rebuff to Reid", The Guardian 2007 Feb 6
- Home Office. Reforming the Law on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 2000. Available from:URL:<http://www.homeoffice.gov.uk/docs/invmans.html>
-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 2005;CM 6497. Available from:URL:[http://www.homeoffice.gov.uk/docs4/tso\\_manslaughter.pdf](http://www.homeoffice.gov.uk/docs4/tso_manslaughter.pdf)
-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Bill. 2006 Jul 20. p. 18
- Hurst G. Lords set to scupper corporate killing bill. The Times 2007 Feb 5
- Labour shelves corporate killing bill. The Guardian 2002 Nov 8.
- Leckie D. Bad press is biggest deterrent in 'kill' Bill. Personnel Today 2007 Jun 5
- INQUEST Chritable Trust. Statistics-Deaths in police custody. 2013. Available from:URL:[http://inquest.gn.apc.org/data\\_deaths\\_in\\_policecustody.html](http://inquest.gn.apc.org/data_deaths_in_policecustody.html)
- INQUEST Chritable Trust. Statistics-Deaths in Prison. 2013. Available from:URL:[http://inquest.gn.apc.org/data\\_deaths\\_in\\_prison.html](http://inquest.gn.apc.org/data_deaths_in_prison.html)
-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2007. p. 3
- Monbiot G. Far too soft on crime. The Guardian 2004 Oct 5.
- Sim JJ.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nd the Suggestions. In: Materials for Discussion on Reforming of the Law for Strengthening of Death Accident and Contractor Liability; 2013. p. 96
- The Law Commission. Legislating the Criminal Code: involuntary manslaughter. Law Com 1996a; 237:HC 171. Available from:URL:<http://www.lawcom.gov.uk/files/lc237.pdf>
- The Sentencing Council. Consultation Paper on Sentencing for Corporate Manlaughter 2007. Available from:URL: <http://www.sentencing-guidelines.gov.uk/docs.pdf>
-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vailable from:URL:[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19/pdfs/ukpga\\_20070019\\_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19/pdfs/ukpga_20070019_en.pdf)
- Tran M. Corporate killing bill unveiled. The Guardian 2004 Nov 23
- Woodley T. Letters: Manslaughter bill must ensure justice for those killed at work. The Guardian 2006 Jul 24